



# 마녀사냥으로 연막 치더니 복지 먹튀하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 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재벌들의 요구에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는 이내 복지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했다. 정부가 그저께 발표한 2014 예산안에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반값등록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배정된 예산이 0원이거나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세수 부족이 큰 상황이라 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명박이 깎아 준 법인세만 원상 복구해도 해마다 수십조 원이 마련된다. 추가로 깎아 주는 법인세 비과세·감면액만 연간 9조 원에 이른다. 기업들이 쌓아 둔 사내잉여금 수백조 원이나 조세도피처에 빼돌린 또 다른 수백조 원에 세금을 물리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무상의료도 당장 가능하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이처럼 기업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부자 증세를 극구 피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부자들의 이익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면서, 임금 억제, 비정규직 확대, 복지 축소, 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며 고통전가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속아만 보셨어요? 원래 이런 말은 사기꾼들이 잘한다.

## 반값등록금 공약파기, 대학 구조조정 추진 — 대학생 우롱하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1조 6천억원의 국가장학금예산증액분을 4천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버렸다.

사실상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대학평가에 기초해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해서 어떤 학생들은 고작 1만원

의 장학금만 받기도 했다.

박근혜는 등록금 인하도 사립대의 ‘자율적 노력’에 맡겼는데,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평균 등록금 인하액은 3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8월 말, 교육부는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35개를 발표했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애꿎은 학생과 대학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대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자, 오히려 기성회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립대 재단들이 등록금에서 교직원 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단들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교직원들만 공격하면서 노동자와 학생들을 이간시키고 있다.

교육권을 공격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며 ‘헌법 정신’을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청 축소은폐 재판은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선 기간 중 댓글 사건이 폭로되자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권영세와 박근혜 ‘뒷밭’ 대구의 3선 국회의원 서상기는 국정원을 매개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대선 개입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느라 그랬을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증거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발표 시점부터 잡았다. 활을 쏜 뒤에 과녁을 그린 격으로 미리 정해진 수사 결과에 증거를 짜 맞추는 것이다.

반면에 윗선의 외압을 폭로한 수사책임자 권은희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는 모욕을

들고 최근에도 경찰청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연이은 수모를 겪고 있다.

국정원 공작은 결코 선거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국정원 차장은 재판정에서 “(국민들 생각이) 오염되면 치료가 어렵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껄었다. 심리전단장 역시 재판정에 나와 자신들의 활동은 “중복세력의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타깃이 없다”며 사실상 어떤

내용이든 공작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개치고 다닌 것도 아니다. 특히 국정원은 노동운동도 눈엣가시로 여겼다. 지난해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건설팅의 문건에서 국정원 처장의 연락처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작태들을 봤을 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악한 진실이 많이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우파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는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15년간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저항에 밀려 몇 달 미뤄던 밀양 송전탑도 10월부터 폭력 강행할 조짐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치적 반동 속에서 복지 먹튀와 경제 위기 고통전개 정책도 본격화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노동자 증세,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등 각종 개악 조처들이 줄줄이 발사대에 올라 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8월 28일에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국정 동반자"라며 손을 잡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박근혜는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며 '보수대연합'을 공고히 하려 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집권당 실세 김무성



대놓고 고통전개를 '모의하는' 박근혜와 재벌들

도 "역사전쟁"을 선포하고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파정권이 집권해야 한다"며 우파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역사·경제 교과서의 '좌편향'을 10년

전부터 문제 삼아온 선구자는 바로 재벌 총수들 모임인 전경련이다. 2008년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제작을 후원한 것도 전경련이었다.

요컨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은 보수화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쟁취한 민주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전교조 불법화 시도가 대표 사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먹튀는 광범한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 갈등에서 보듯 저들 내부에서도 반동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갈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함께 힘을 모아 민주적 권리 방어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복지 후퇴, 재벌 퍼주기, 민주주의 공격 등에 맞선 분노들이 한 데 모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함께 가요!** 010-5678-8630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규탄 집중촛불  
10월 5일, 12일, 19일, 26일

**범국민 집중 촛불**  
10월 19일 (토) 서울도심 (장소미정)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 용두사미로 드러내기 시작한 마녀사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는 국정원의 구속 영장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라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성격만 확인해 줄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였고 용두사미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이 왜곡·과장된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런 억지 기소가 가능한 것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들이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약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26일 오후에 한 것도 이날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철회 뉴스의 비중을 줄이려는 꼼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마녀사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보여 준다.

### 박노자, 브루스 커밍스 등 세계 석학의 목소리 -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낸 성명에 서명자가 점점 늘어 총 2백5명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이 성명에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교수(《북조선 탄생》 저자), 오언 밀러 영국 런던대 교수, 서재정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교수, 에드워드 베이커 하버드

대 교수, 구해근 교수(《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저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국 웨스트 위스대 교수, 신현방 영국 런던경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정원이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 혐의로 고소”하고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어 휘두르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 ‘일베충’들이나 환영할 역사 왜곡 교과서

끔찍하게 왜곡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지난 5월 버젓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다.

최근 이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 새누리당, 그리고 우익 단체들이 푹푹 문쳐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는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의 대부적인 유명인을 내정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교묘히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등의 독재자와 이들을 후원했던 미국 제국주의를 대놓고 찬양한다. 뉴라이트 교수인 허동현은 심지어 “일제라는 드리쿨라에게 피를 빨려서 영생을 얻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으로 식민지 시대를 정당화한다. 가히 ‘일베충’들이나 환영할 교과서다.

이 교과서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민중들의 투쟁이 아니라, 그것을 짓밟아 온 이승만·박정희 같은 자가 옳았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 이는 썩은내 나는 박근혜 정권의 뿌리를 정당화하는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추악한 교과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



### 촛불과 저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레프트21 최신호가 나왔습니다!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레프트21〉 112호 주요기사

경제위기 심화와 박근혜 본색

미국 매카시즘의 역사에서 배우다

철도 민영화와 투쟁의 과제 등

<http://www.left21.com>

###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무엇이 왜 문제인가?

연사: 한규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전공 박사과정 수료)

일시: 10월 2일 (수) 저녁 7시 30분

장소: 국민대 공학관 별관 217호

참가비: 2000원 / 문의: 010-5678-8630

주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옛 대학생다함께)